

#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본 공영방송의 위기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기제를 중심으로\*

김상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 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KEYWORDS** '백종문 녹취록', 진영논리, 불법 해고, 전략적 봉쇄소송, 권언유착

\* 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섬세하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6년 5월 28일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유세션 II에서 발표한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본 공영방송의 위기: 언론 통제의 기제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pdkim56@nate.com

## 1. 문제제기

2016년 1월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 기록에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전임 노조 위원장을 지낸 최승호와 박성제, 두 평조합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BBK 문제나 광우병 같은 프로그램은 “다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쌍용차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 “내가 있으면 안 풀렸지”라며 자신이 당시 있었으면 방송이 못 나가게 막았을 거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도 강압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행사해왔음을 스스로 말했다. 2012년 MBC 노조의 170일 최장기 파업 사태 이후 회사가 구성원들을 “생계형으로 장악했다”고 하면서 경력사원 선발과정에서도 출신 지역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백 본부장을 비롯한 MBC 간부들이 인터넷 언론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였다. 회동 당시 <폴리뷰>는 생방송 출연과 외주 제작 청탁, 내부 정보 제공 등을 MBC에 청탁했고, 이 청탁은 박한명이 2014년 12월 26일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전화인터뷰 패널로, 2015년 2월 10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는 토론 패널로 각각 출연함으로써 받아들여졌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의 고위 간부들이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와 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부당 거래’를 한 셈이다. “월급이 없으니까”,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돈”이라서 지속적 재원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백종문 본부장. 그리고 나서 <폴리뷰> 홈페이지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광고가 걸렸다.

이 녹취록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졌다. 공영방송사의 최고 경영자 스스로가 말한 기자와 PD의 ‘불법 해고’, 주류 방송사와 영세 인터넷 언론사 간의 ‘부당 거래’, 제작·편성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부당한 개입’, 경력 사원의 ‘부당 채용’ 의혹 등이 전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한겨레>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인 뉴스타파에서만 2016년 1월 25일 첫 보도되었고, 후속보도도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과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PD저널>, <한국기자협회보>, <민중의 소리> 등 인터넷 언론에서만 계속 이어졌다.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사에서는 무(無)보도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규제기관인 방문진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도 ‘MBC 녹취록’ 파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책임 추궁도 이뤄지지 않았다.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백종문 본부장은 상법상 3년의 임기가 있지만 재임되었다(강성원, 2016, 2, 26). 방통위에서도 ‘MBC 노조원 불법 해

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저해 등에 대한 방문진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정식 논의는 거부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에 의해 긴급 토론회가 한 차례 개최될 뿐이었다. 4·13 총선에서 야3당은 '백종문 녹취록'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직 언론인 문제의 해결,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영방송에 만연한 불법·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9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백 본부장은 '신문 내용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하수영, 2016, 9, 27).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최고 경영진이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인 기자와 PD의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와 단결권을 부정하고 '불법 해고'했으며 제작과 편성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인 언론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잊혀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사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방송규제기관에서도 이 사건은 사실 파악이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채 묻혀버렸다.

이 논문은 언론사의 담당 기자와 PD들, 방송규제기관의 전·현직 이어나 위원들,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묻기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류언론에서는 왜 이 사건이 무보도되었는가, 방문진·방통위 등 방송규제기관들과 국회는 왜 국가 실패<sup>1)</sup>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항세력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노동조합)는 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이 논문의 목적이다.

1) 이효성(2009, 183쪽)은 공산권이나 제3세계에서 국가가 주요 방송을 소유하고 운영할 때 그 독립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방송에서의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라고 본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다.

## 2. 문헌연구

### 1) 공영방송의 언론 통제 기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은 태생적으로 정치권력과의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방송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어느 매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어떤 집권층도 방송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까닭이다. 2008년 6월 촛불 시위 이후 1년은 한국 언론의 제2 암흑기였다. 5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언론인의 해직·체포·구속 등이 잇따랐다(안수찬, 2009, 4, 24). 검찰은 ‘명예훼손’ 소환에 불응하던, 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수첩> PD들과 작가들을 체포했다.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가 경질됐고, 방송인 김미화와 김제동 등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교체되었다(이정환, 2012, 9, 30). 또한 권력을 감시하던 탐사보도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이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았고, 민군합조단이 결론을 내린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KBS <추적60분>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이나 MBC의 <후 플러스>와 <W> 등의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처럼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권력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권력에 복종시키고 방송사 내부 종사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려는 언론 통제로 나타난다.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김상균·한희정, 2014; 김연식, 2014; 김연식·박홍원, 2011; 남효윤, 2006; 박인규, 2010; 박준영, 1997; 유창하, 1989; 윤영철, 2006; 이재경, 2003; 정필모, 2012; 홍은희, 2006)는 통제의 요인이 조직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 조직 외적 통제와 조직 내적 통제로 나뉜다. 또 통제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혹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공식적 통제 연구와 비공식적 통제 연구로 구분된다.

외적 통제에 관한 연구로는, 원로 언론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을 분석한 이재경(2003)의 “언론인 인식을 통한 한국 사회와 언론 자유의 조건 연구”, 신문에 대한 정치적 통제 환경의 변화를 추적해 “전환기 한국 신문의 과제: ‘좋은 신문’의 조건”을 탐색한 윤영철(2006)의 연구가 있다. 내적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로는, 기자들의 뉴스 가치관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유창하(1989)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의 내적 통제에 관한 연구”, YS시절 언론 상황을 비판한 박준영(1997)의 “한국 신문 뉴스 결정의 역할관계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내·외적 통제를 통합한 연구로서 남효윤(2006)은 “언론보도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문의 규모에 따라 게이트 키퍼 과정에 작용하는 내·외적 통제 요인도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규모가 큰 신문'의 기자들은 게이트키퍼 과정에 있어서 신문사 자율규제, 개인적 차원의 통제, 데스크에 의한 통제 순으로 통제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신문'의 기자들은 경제적 통제와 소유주·경영진에 의한 통제가 절대적이라고 응답했다. 홍은희(2006)의 연구는 신문사의 경영적 통제요인이 기자의 홍보원(PR source) 인식을 달리하게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김연식과 박홍원(2011)은 일반 취재 기자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PD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직능 및 방송사별 차이에 초점을 둔 "방송 저널리즘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자는 정치권력에, 프로듀서는 시청률과 시청평가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연식(2014)은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방송저널리스트가 예전보다 더 많은 통제압력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지상파의 담당 PD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접근으로써 언론 통제를 분석한 논문이 주목받아왔다. 박인규(2010)는 KBS 시사프로그램이 이명박 정부 이후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정권이 불편해 할 수 있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회피해온 까닭이 제작진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기인함을 밝혀냈다. 정필모(2012)는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방송 보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적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를 접목해 공정성 저해 요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김상균과 한희정(2014)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이 2010년 11월 <추적60분> 이후 중단된 것은 군에 의한 정보 독점,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 '낙하산 사장'의 압박에 의한 제작진의 자율성 약화, '중복몰이'로 인한 방송사나 제작진의 자기검열 기제작동 등에 기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와 같이 미디어 통제 연구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는 그 작동의 과정과 배경을 구명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지배구조(governance)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제를 통해 조직의 이해당사자들이 관계를 조정하고 경영을 감시·규율하는 장치다(김화진, 2009: 정필모, 2012, 54쪽 재인용; Williamson, 1998).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한국의 공영방송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방송계는 소위 권력의 '낙하산 사장'의 선임 문제로 인해 노사 간 격렬한 갈등을 겪어왔다. 2012년 KBS, MBC, YTN 등 방송 3사의 장기 연대 파업은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 사례다. 특히 MB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이라는 장기 파업의 후유증을 앓았다. 하지만 지금도 이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한층 악화되기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공약 중 한 중요한 부분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었던 것도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정보방송통신인들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언명했다(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 2012:강상현, 2013, 42쪽).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에도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적 영향권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했다(42쪽). 이런 시대적 긴급성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언론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산출해왔다(강상현, 2013; 강형철, 2012; 김경환, 2013; 김경환, 2016; 윤석민, 2013; 이준웅, 2013; 이춘구, 2014; 주정민, 2012; 최영목·박승대, 2009; 한수경, 2015; 황근, 2010).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방송개혁의 목표이자 효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였다. 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최영목·박승대, 200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방송규제기구의 위원이거나 공영방송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선과정이나 주요 안건 처리에서 특별다수제(혹은 가중다수결제)<sup>2)</sup>를 도입하자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결론이었다.

### 3) 무보도 현상

최근 한국 언론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보도 현상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자사의 이익 때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현상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나 <PD저널> 등 언론전문매체의 미디어 비평 기사나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미디어 감시 시민단체의 주요 일간지·지상파 일일모니터<sup>3)</sup>에서 이 무보도 현

2) 여야 이사진이 사장 선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상대방 동의를 확보해서 최소한이라도 합의적 선출이라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강상현, 2013).

3) <http://www.ccdm.or.kr> 참조

상은 주류 언론이 여론을 오도하거나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택섭(1998)은 침묵하는 신문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균형 있는 신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는 언론환경에서 무보도에서 오는 폐해가 오보에서 오는 폐해보다 더욱 큰 해악일 수 있고, 의견을 말하지 않는 중립·중도가 언론의 미덕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수정과 정연구(2011)는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관련하여 점차 두드러지는 무보도 현상이 1)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2)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라는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서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이 매우 정파적인 특징을 띤 무보도를 하고 있고, 이 무보도 현상이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정수영과 남상현(2012)은 2011년도 지상파TV 3사 저녁종합뉴스프로그램의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배제된 무보도 뉴스와 이를 대신하여 선택된 단독보도 뉴스를 추출하여, 뉴스주제 및 뉴스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 의해 공적 매체로서의 TV 뉴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What they want)'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What they need)'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언론학은 객관적·실증적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보도된 뉴스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해왔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언론사의 무보도라는 현상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무보도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주류언론에 의한 '백종문 녹취록'에 관한 무보도는 공영방송 MBC의 최고경영진의 불법·부당 의혹 혐의가 있는 경영행위에 의해 정직한 기자와 PD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공영방송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거나 방송규제기관이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기능에 실패할 때 시청자 주권주의에 의해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류언론의 무보도의 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백종문 녹취록'이 주류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소위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이 생겨난 원인에 대한 질문은 한국 언론의 변화된 정치 지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수언론이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넘어 장기적으로 권력 장악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치를 선도하고 결핍된 부분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이 질문은 한국 언론사에 대한 권력의 언론통제의 실체와 그 기제를 명료히 드러낼 것이다.

연구문제 2. '백종문 녹취록'의 진실이 방송규제기관이나 국회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MBC의 관리 · 감독기구인 방문진이나 방통위에서는 이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야당 추천의 이사들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다수결에 의해 기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 이 사안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질문은 현재 방송규제기관의 이사나 국회의원들이 정의의 실현을 외면하면서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히 진영논리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부당 노동행위'라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2016년 4월 이래 10개월째 노동조합 위원장은 1인 파업 중이다. 공권력과 '낙하산' 경영진의 무도한 탄압으로 MBC의 조직 문화도 변화하고 있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PD협회도 탈퇴하는 회원이 있다. 회사가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도 내부 저항을 억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 언론 역사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역사적 처벌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그 한 원인으로 거론될 것이다.

## 2) 연구방법

이상의 연구문제들을 풀기 위해 연구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의 기자와 PD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전문지의 담당 기자들, 방송규제기관의 전 · 현직 이사와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계의 전문가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2016년 4~5월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응답자가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 1. 인터뷰 대상자

|   | 인적 사항          | 담당 업무                                       | 인터뷰 날짜       |
|---|----------------|---|--------------|
| A | 공중파 PD         | 시사, 탐사 프로그램 제작                              | 2016년 4월 26일 |
| B | 최승호 PD         | 전 <PD수첩> 팀장, 앵커, 현 뉴스타파 앵커                  | 2016년 4월 27일 |
| C | 공중파 기자         | 보도국, 뉴스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 2016년 4월 27일 |
| D | 인터넷 기자         | 인터넷 뉴스 보도                                   | 2016년 5월 1일  |
| E | 이용마 기자         | 전 MBC 보도국, 현 해직기자                           | 2016년 4월 26일 |
| F | 최원형 기자         | 한겨레, 공중파 방송사 출입                             | 2016년 4월 29일 |
| G | 강성원 기자         | 미디어오늘, 공중파 방송사 출입                           | 2016년 5월 6일  |
| H | 최상훈 기자         | 뉴욕타임즈                                       | 2016년 5월 4일  |
| I | 이완기 이사         | 방송문화진흥회                                     | 2016년 4월 22일 |
| J |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전 신문사 기자, 특파원                               | 2016년 6월 17일 |
| K | 안병욱 명예교수       | 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2016년 5월 3일  |

답할 수 있도록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가능한 한 연구자가 '중립적 태도'를 가지려 했지만 인터뷰 주제 자체의 불법성이나 부당함이 두드러져 그러기가 매우 어려웠다. 인터뷰 장소는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커피숍을 선택했다. 인터뷰 시간은 대상자별로 각각 40분에서 2시간 남짓 소요되었다. 단지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우, 약 20분 정도의 전화통화만이 가능했다. 면담 대상자 중 몇 사람은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인터뷰 질문은 반개방형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해 녹취록으로 분석했다. 심층인터뷰를 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4. 연구결과

### 1) '백종문 녹취록'에 관한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이유

#### (1) 주류 언론의 정파성

한국 언론의 권력화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층 가속화해왔다. 조항제는 이를 '언론, 선

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젠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이었던 정치권력이 뒤로 물러나고 언론권력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권력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를 강준만(2000)은 '권력변환'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고 있다. 정치가 여론정치로 이행되면서 여론의 생산자 기능을 가진 언론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15여 년이 더 흘렀다.

11년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미국 유수의 네트워크 방송사를 참여·관찰한 터크먼(Tuchman, 1978/1995, 36쪽)은, 뉴스 조직은 뉴스 보도를 통해 현상유지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종편TV까지 보수언론이 장악한 상태다. 언론이 제1권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터크먼의 이론에 따르면, 주류언론이 '백종문 녹취록' 사건에 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주류언론이라는 게 조중동, 공영방송인데 왜 보도하겠어요. 공영방송은 다 잡혀 있는 거고, 조중동은 마찬가지로 정파적 관점에서 보도를 안 하는 거지요. (최승호)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지금 어버이연합 기사가 막 쏟아지지만, KBS나 MBC에선 보도 안 하죠.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방송을 안 하는 거죠. 아부언론이니까, 간신언론들이니까 그렇죠. (PD A)

워낙 조중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면, 관심을 안 뒹요. 게다가 다른 일간지는 미디어 출입하는 기자가 없어요. 일간지나 방송은 출입처 문화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출입처 아니면 아무리 큰 이슈여도 굳이 내가 쓸 필요는 없죠. (강상원)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권력을 향유하는 당사자가 보수언론이나 주류언론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과 한배를 타고 있는 MBC 최고 경영진의 흠결을 보도해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훼손할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다.

나는 첫 번째는 진영논리이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관행, 동업자 보호, 그런 측면, 정서도 있었을 거예요. (이완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BC는 이쪽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 안 한다. 이런 식의 생각 구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위 진영논리. 물론 정파적인 입장을 스스로 자처하는 순간 언론 기능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미디어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이기주의까지 겹쳐서. (최원형)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침해한 이슈에 들어가면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판 싸움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뛰어들어가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을 선동하고 나서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주류언론이 저지르는, 침해한 이슈에 들어가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최상훈)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진영논리. 친권력적인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편을 공격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자사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면, 공정하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중지한다고 한다. 사실 확인의 규율에 입각해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제1차 목적을 한국의 언론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Kovach & Rosenthal, 2007/2009, 20쪽).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되거나 징직 등 징계를 받은 이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분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처음부터 그럴 거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서 백종문 씨가 이야기할 정도로, 근거가 없어도 자른다, 재판에서 지면 받으면 되지, 그게 놀라웠습니다. 공영방송은 법 규범이나 상식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조직인데, 그런 조직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최승호)

비록 증거 없이 해고했지만 2심에서는 엮어 넣어야 한다, 잡아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호사를 많이 쓰고 소송비용을 많이 쓰서 2심에서, 1심에서는 해고 무효가 났는데, 해고 정당하다고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돈을 써서 변호사를 써서. 이걸 범법행위 아니에요? (PD A)

솔직히 불편했어요. 공영언론사의 고급 간부가,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이미 스캔들이 됐으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지요. 사회지도적 인사로서는 정말 비굴한, 외국

같으면, 사퇴를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최상훈)

해고를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폭력적으로 내치는 거 아냐. MBC는 우리 사회의 가장 상층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야만적으로 나오니까. 나는 가장 염려되는 게, 그 영향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MBC도 저런데, 우리는….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도 본받는다구요, 더 심하게 증폭돼서. (기자 D)

지금 우리 사회에 권력을 쥐고 있는 위정자, 집권층들은 그런 비열하고 야비한 짓거리를 통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 내에서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일지도 모르지요. 그들 세계에선 상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는 거지요. (안병욱)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박성제 기자는 “나의 해고 사유가 뭐냐, 답변을 해달라” 했지만 답변은 않고 “빨리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나가라”라는 말만 들었다. 최승호 PD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나가라”였다. 왜 해고하려고 하는지, 왜 징계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방송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녹취록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은 가차 없이 희생양으로 만들고, 법이든 규정이든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 (최승호)

녹취록에 박성제 기자와 내 이름이 거론됐지만 나머지 해고자들, 정직, 인사발령 등 파업 관련해 징계 받은 170여 명에게도 결정 과정은 모두 똑같았다고 본다. 증거 없이 누가 과연 어떤지,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기조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징계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방송 내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승호 인터뷰: 문현숙, 2016, 2, 2 재인용)

20여 년 이상 MBC에서 근무하면서 완성도 높은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해온 PD와 기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는 해고 사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현 MBC 안광한 사장이다. 백종문 본부장도 그 위원이었다.

##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기능의 무력화

공중파의 탐사보도프로그램이 적어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처럼 살아 있었다라면

‘백종문 녹취록’ 같은 사건이 지금처럼 망각되어갈 수 있을까. MBC의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KBS의 〈추적 60분〉, 〈취재파일4321〉,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저적〉과 같은 탐사보도프로그램들이 최소한의 프로그램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탱할 수 있었다라면 ‘백종문 녹취록’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영방송사가 ‘낙하산’ 사장에 의해 침탈당하고, 그 사장들을 따르는 중간 간부들에 의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장악되면서 공영방송사의 권력감시 기능은 점점 더 무력화해갔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노동조합은 이미 5차례의 파업을 했다. 2012년 1월 30일, 노동조합의 마지막 파업에는 KBS와 YTN 노동조합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을 위해 공동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MBC 노조는 170일이나 분투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얼어붙은 공안 정국 속에서 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파업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외면”했다(박성제, 2017, 1, 9).

파업에 참여했던 PD들은 프로그램에서 다 배제시켰고, 고발 프로그램은 전혀 못 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백종문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말한다.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억압당해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자발적으로 권력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 ‘BBK’, ‘광우병’ … “MBC가 2000년 초부터 끊임없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고”, …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80에서 한 50명 … 노동조합에 몸을 담아 가지고 자기네 기득권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예요. 카메라 기자, 아나운서, 영상카메라, 보도국의 일부, 요런 친구들, 교양국에 일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은 모두 친권력적인 ‘낙하산 사장’<sup>4)</sup>으로 교체되었다. 언론특보 출신 KBS의 김인규 사장이나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MBC 김재철 사장은 취임 후 권력을 감시하던 탐사보도프로그램이나 시사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을 교체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했다.<sup>5)</sup> 〈뉴스 9〉이나 〈뉴스테스크〉 등 간판

4)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장이 된 KBS 김인규 사장, 고대영 사장이나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은 모두 본사 출신이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막강한 비호 덕택이라는 측면에서 흔히 이들을 ‘낙하산 사장’이라고 일컫는다.

뉴스 프로그램들도 5공화국 시절의 ‘땡전’ 방송처럼 대통령의 동정을 소개하는 뉴스가 우선적으로 보도되었다.

2014년 4월 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여러 후배 기자들 앞에서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국, 2014, 5, 5; 박은하·조형국·박홍두, 2014, 5, 8). 세월호 희생자들을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유한 이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다. 세월호 유가족의 KBS 항의 방문 시 자리를 비웠던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 압력을 받은 후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다. 이 과정에 김 국장은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개입해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길환영 사장에게는,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는,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정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했다. 김 국장의 폭로는 KBS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와 양대 노조의 파업을 초래했고 결국 길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KBS 보도에 대한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간섭과 개입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2016년 4월 12일 자신의 징계무효확인소송 재판부(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비망록에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이 비망록엔 사장이 ‘국정원 댓글 단독 리포트 빼라’, ‘기계적 중립<sup>6)</sup>마저 포기하라’, ‘박근혜 대통령 리포트는 앞쪽으로 전진 배치 또는 수를 늘리라’, ‘윤창중 톱으로 다루지 마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 리포트가 맨 뒤에 배치되자 항의전화’를 했다는 등의 기록이 담겨 있다(조현호, 2016, 5, 11; 2016, 5, 16). 2013년 8월 21일 오전에는 편집회의 중 사장실에 호출되어 전날 나간 “국정원 댓글작업 11개 파트 더 있다”라는 방송이 적절하냐고 사장이 다그치며 “뚝바로 좀 해! 어떻게 이런 게 나갈 수 있어?”라며 고함을 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 소식은 2013년 10월19일 9시뉴스 맨 뒷부분의 ‘떠단신’(단신 모음)에 넣으려 했으나 사장이 절대 다루지 말라고 했다(조현호, 2016, 5, 12).

5) KBS의 경우, 2008년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는 폐지되었다. MBC는 2010년 <후 플러스>와 <김혜수의 W>를 폐지하고 MBC <PD수첩>의 팀장과 국장을 교체했다. 2014년 MBC는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시사다큐멘터리, <불만제로> 등을 제작해온 시사교양국 자체를 해체했다.

6) 재판부는 ‘기계적 중립’에 대해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 맥락을 무시하고 여러 의견을 단순화시키며 의견 비율도 1:1로 방송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가리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제라는 것이 꼭 위에서 정치권력이 청와대에서 얘기한다고 직접 지시를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알아서 저쪽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런 것을 미화시켜서 알아서 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사장을 그런 사람을 앉히고 그 밑에 본부장, 국장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 그 사건은 그 와중에 희생양을 국장 하나로 삼아서 돌파하려다 치는 바람에 나온 것 아니에요. 해프닝성이지요. 해프닝성이지만 그 통제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나왔잖아요. (기자 C)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권연유착 관계가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춘효, 2015). 이 관계를 '클라이언텔리즘(clientelism)'이라 부르는데, 조항제는 이를 '후견주의'로 번역했다. 피후견인(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 이사)이 후견인(집권세력)에게 복종과 지지를 보이면 그 대가로 피후견인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사회 조직의 한 유형이다(김춘효, 2015).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계에서는 이 후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 방안으로 NHK나 독일 ZDF의 제도처럼 특별다수제(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강상현, 2013; 김정환, 2015, 2016; 최진봉, 2014). 여권이나 야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한편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구조가 경영진의 구성뿐만 아니라 보도국 내의 정파적 분열의 악화 현상까지 초래해 극도의 언론 자유 위축과 불공정보도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공영방송의 친권력적인 경영진이 보도국 조직과 취재보도 관행에까지 침윤하여 왜곡·편파적인 보도를 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최영재, 2014). 특히 이명박 정부 이래 친권력적 경영진에 대해,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해 장기간 파업을 겪은 MBC 보도국이 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2012년 1월 30일 이래 170일 동안 노사가 극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했던 MBC. 파업을 기점으로 언론사로서의 MBC는 끊임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시사·보도 측면에서 그 후유증이 극심하다. MBC 내부에 엄청난 인적 구성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 이후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은 부서가 시사교양국과 보도국 영상취재부문이었다. 이 두 조직은 부서 자체가 해체되었다. 시사교양 PD들은 시사제작국과 신설된 콘텐츠제작국·예능국·편성국의 MD(주조정실 진행), 경인지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스퀘이트장 관리, 신사업개발센터, 매체전략국, 자산개발국 테마투어 등 9개국 15개 부서로 분산 배치되었다. 시사교양 PD 70명 중 30여 명이 해고, 정직, 감봉, 부당전보 등을 당했다

표 2. 파업 전후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 변화

|     | 파업 이전(2011년) | 파업 이후(2013년) | 파업 이후(2014년) | 파업 이후(2016년) |
|-----|--------------|--------------|--------------|--------------|
| 영향력 | 1위(42%)      | 3월(27.4%)    | 4위(22%)      | 5위(14.9%)    |
| 신뢰도 | 1위(24.9%)    | 4위(14.7%)    | 6위(9.7%)     | 6위(10.3%)    |

\*자료 출처: 시사저널 설문조사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2015, 5, 14; 문화방송노보, 2016, 11, 15). 시사교양국의 소비자 문제 탐사프로그램인 <불만제로>는 폐지되고, <PD수첩>은 무력화되었다. 최경진 교수는 MBC의 이런 파행적 경영이 MBC의 급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특히 시사교양국을 해체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프로그램 제작을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그 제작진들을 해고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김회권, 2015, 9, 21). 회사는 이러한 ‘부당 전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경영상의 이유’를 강조했다. 피해 조합원들이 전보 발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회사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최원형, 2016, 1, 25).

백종문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파업에 참여해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50여 명”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이 파악하고 있는 ‘업무 배제’ 인원도 50여 명으로 사실상 일치한다. 백 본부장은 울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 “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노조로 간다”고도 말했다. “라디오는 다 빨강다”, “피디는 프로그램 다 배제시켰다”, “(예능 프로그램은) 회사가 손을 못 대고 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는 회사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인력들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경영진이 새로 뽑은, 출신 지역까지 보면서 ‘검증’한 경력직 사원들로 소위 ‘물갈이’를 전격적으로 주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원형, 2016, 1, 25).

무참하게 김재철이 인사로 짓밟은 거죠. 보도국은 2009년에 몰락했거든요. 파업하는 기자가 밍다고 2009년에 팀장급, 부장급 등 중견기자들을 쫓아버린 거죠, MBC 기존의 DNA를 바꾸겠다고 그 후 수년간 취재기자 약 70명을 뽑았잖아요. 신입기자가 아니라 경력 기자로. 취재 기자 70명이면 웬만한 언론사 전체 기자 수거든요. 뉴스데스크에 참여하는 기자 수가 정확히 10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70명을 교체해버린 거예요. 아무 훈련을 받지 않은 대체인력들을 투입해버린 거죠. (전 보도국 정치부, 사회부 기자 인터뷰, 2014, 1, 14)



2014년 한 익명의 기자는 새로 입사한 경력 기자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김재철이 2013년 170일 파업 때에 뽑은 소위 '시용 기자'라는 사람들은, 취재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아예 취재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음.

철자법이나 맞춤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출입처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아예 기자 경력이 없거나 혹은 금품 수수나 성(性)을 무기로 취재했던 과거 사례가 드러나 입사 이후 퇴사당한 사례까지 있었음

언론에서 일선 기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가 한창 살아 있을 때의 일화다.

2008년 쇠고기협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공교롭게 PD수첩이 쇠고기 협상을 방송한 날, 보도국에서도 의약전문기자도 참여해서, 그날부터 3부작으로 나갔어요. 보건복지 담당하는 기자 2명하고 의약전문기자, 신재원 기자(현재 퇴사)라고요. PD수첩도 파문이 컸지만 신재원 의약전문기자의 리포트가 무진장 파문을 일으켰거든요. 2008년 당시 다음 기사에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붙었습니다. 신재원 리포트에. 조회 수도 엄청났지요. 의약전문기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온 전문가들을 만났거든요. 제일 전문가는 서울의대 교수예요. 정말로 협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프리온 전문가 입장에서 보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반향도 컸지만 소송도 안 걸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촛불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생방송에서 임명현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 발표의 오류를 꼼꼼히 지적하면서. 전체 진의는 이근데 왜 그건 밝히지 않느냐, 현장에서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MBC, KBS, SBS. 케이블 등 전국으로 생방송하는 현장입니다. 정부의 제1차 대국민 해명 기자회견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더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방송기자의 역할은 생방송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진실을 밝혀내야 하니까... 30~40년간 쌓아왔는데... 모든 것이 성역이 되고 방송 기자라는 게 뭐랄까, 그냥 뭐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나팔수,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지금은 허무해졌죠. (전 보도국 정치부, 사회부 기자 인터뷰, 2014, 1, 14)

회사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낙하산 사장’의 불법·부당한 인사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던 고유의 조직문화를 붕괴시켜버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 맨파워가 너무 약해져 이제는 정치부 1진이니 2진이니 모두 새로 뽑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펴는 논리가 신입기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강했던 MBC 구성원들, 특히 기자나 PD가 다 본인이 어찌면 소사장 같은 책임을 갖고 내가 제대로 해야만 회사가 돌아간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던 사람들인데, MBC 문화를 전혀 모르는, 훈련도 안 받은 친구들로 교체해버리니까 이젠 사라져버리는 거죠. (전 보도국 정치부, 사회부 기자 인터뷰, 2014, 1, 14)

지금 MBC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MBC 내에서도 굉장히 편향된 소수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데, 바로 그 적은 소수가 MBC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가 계속 돌아가면서 자리를 메꾸면서 해먹는 거예요. MBC 내의 주요 포스트를 일베 성향의 사람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MBC 내에 10%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90%가 소외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마)

이명박 정부 이래 MBC의 인사는 MBC 경영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사폭거가 진행 중이다. 친권력적인 임원이나 국장은 회전문 인사로 장기간 보직을 맡고 있는 반면,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나 PD, 사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된 채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만 있어도 큰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JTBC에 손석희 씨가 사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기자들이, 머리 다 큰 기자들이 다 변했잖아요.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반대로 MBC 같은 경우, 김 모 국장이 정치부장 하다가 보도국장 한지 꽤 오래됐는데, 보도국장(가)이 기자들을, 자신의 생각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을 앉혀놨을 때 그 조직에서 생산하는 아웃풋은 뻘한 거죠. (전 보도국 외교·국방 출입 기자 인터뷰, 2014, 9, 16)

이용마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근래 얼마나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고 있느냐는 한 예를, 어버이연합에 대한 무보도 현상으로 지적했다.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7) 현재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전경련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단체와 국정원, 청와대와 여기 어버이연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경련에서 돈을 줬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 의해 상시적으로 통제를 당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그럼 청와대와 국정원과 전경련,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다 등장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이걸 리포트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KBS도 MBC도 보도를 안 합니다. 조중동은 사설로라도 조져요. (이용마)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조직문화로 바뀔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자나 PD들이 부끄럽고 울분에 차 연대하여 경영진에 대해 파업을 하더라도 실패를 거듭할 때, 정당한 파업을 그 사회가 지원해주지 못할 때, 개인은 차츰 침묵에 익숙하게 된다. 무기력해지고 각자 살 길을 모색하면서 공동의 선에 대해선 차츰 무관심해진다. 공영방송사의 보도나 탐사프로그램이 권력의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권력을 보호나 하면서 '권력의 나팔수'로만 기능하는 시대로 전락했다.

## 2) 방송규제기관과 국회의 진영논리

### (1) 방문진의 진영논리

2016년 1월 25일 <한겨레>와 뉴스타파에 '백종문 녹취록'이 보도된 그다음 날, 방문진의 이완기 이사는 유기철 이사와 둘이서 방문진 이사장을 찾아갔다.

긴급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중요한 일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긴급사항은 아니다. 내가 따졌죠. 왜 긴급사항이 아니냐? 고영주 이사장은, 벌써 1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요. (이완기)

그리고 이튿날 회사의 보도자료 '알려드립니다'가 나왔다. "최승호, 박승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2016년 1월 26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흘 후 '선거철 정치공작 또 시작인가'(1월 29일)라는 문건이 이어서 배포되었다.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좌파 매체들이 한 몸이 되어 선량한 MBC 직원을 선동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잘못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문진이나 소수 MBC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는 집단이나 국회, 이런 분들에게 근거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정파적인 대립지형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순화시키거나 무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원형)

2016년 2월4일 방문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여당 측 이사들은 한결같이 “술 마시고 헛소리”한 거다, 사적인 자리다, 또 다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2월 18일,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가 올린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은 무산되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논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방문진 차원의 아무런 조치와 대응도 결정하지 못했다. 4월 7일 이사회에서도 녹취록 안건은 공방만이 계속되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MBC 녹취록 안건을 이제는 더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권순택, 2016, 4, 7).

정말 말이 안 되고 몰상식한 사건이지만 어쨌건 여권에선 MBC 경영진을 혼드는 것이 자기네 정권 유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방문진은 끝까지 지키는 거지. 소위 뉴라이트뿐만 아니라 방송학회장을 한 학자조차도 그런 정파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그냥 수용하는 거죠. (최승호)

한마디로 진영논리입니다. 진영의 논리라는 건 군사문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무조건 이겨야 하지요. 승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 평화, 평등, 정의라든가 부끄러움, 도, 예의라든가 이런 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실제로 방문진 이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쪽 여당 측 이사들은, 당신들 전부 야당 추천받아가시고 국회에서 면접하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아니냐, 니네는 저쪽 사람이고 우리는 이쪽 사람이다.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완기)

현재 방문진의 회의록은 미공개 상태다. ‘백종문 녹취록’에 관련된 회의에서 무슨 토의가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방문진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늘 논란이 벌어진다고 한다.

고영주 이사장은 회의 때마다 개인의 자유권에 매우 집착해서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사

실 자체를 별로 인식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시는데. 이 사안에서는 백종문 본부장이 공인의 신분일 수 있다는 점을 별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시더군요. 그래서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폴리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표현의 자유다 이런 걸 더 강조합니다. (최원형)

대외적으로 '백종문 녹취록'은 이미 공표되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의 임원으로서 몸서부끄러운 스캔들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방문진에서 백종문 본부장을 유입시킨 것과 관련해 또 다른 근거가 거론하기도 한다.

사실은 최악의 구조지요. 일단은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외에 따로 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재풀이 많으면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 적은 인재풀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쉽게 말해 자기들만의 거래가 이뤄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는 부정부패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들, 해외여행 같은 것 MBC에서 많이 시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방문진에서 MBC 이사들 이번에도 임금을 또 올려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2014년 사원들은 동결인데 임원들은 8.5%를 올렸어요. 본부장들만. (이용마)

## (2)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의 실패

방통위(최성준 위원장) 역시 '백종문 녹취록'으로 불거진 전국언론노조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MBC 부당해고를 포함한 편성제작권 침해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2016년 2월 4일 제8차 방통위 회의에서 고삼석·김재홍 두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이 사안이,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청자 단체, 시민사회의 요구를 근거로 MBC 경영진과 MBC에 대한 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정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인 제재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 이기주·김석진 두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방문진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에 반대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여당 측 두 위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안건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측 위원들이 제출한 'MBC 노조원 불법해고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저해 등에 대한 방문진 자료제출 요구안도 여야 두 측의 의견이 엇갈려 보류되었다(방통위 속기록, 2016, 2, 4). 최성준 위원장은 1월 28일 회의에서도 “해고와 관련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방통위 속기록, 2016, 1, 28). 최 위원장은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BC 녹취록 관련 대정부질의에서도 “방통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방송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금 구체적으로 할 것이 없다”며 “방통위 입장에서 (MBC 내부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권순택, 2016, 2, 18)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방송규제기관이 이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인 판단이며 진영논리에 빠져 당연히 규제기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드세다.

방통위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적 토대가 합의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또 운영의 원칙에 비추어서 당연히 논의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야당 쪽 추천 두 분은 아마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 쪽 세 사람은 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결국 진영논리라고 봐야겠지요. (전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당연히 규제기관 아니에요. 소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당연히 규제기관이 나서야지요. 완전히 직무유기지요. (기자 C)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위원들이 규제기관의 위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규제위원으로 만들어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결정과정에서 잘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안이 보도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상훈)

방송규제기관이 정파적 이해 때문에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능에서 실패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 (3) 국회의 정파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측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MBC '백종문 녹취록'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거부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측은 2월 19일 "(야당이 임시 국회에서) MBC 녹취록 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것인데 (해고무효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정철운, 2016, 2, 19)고 밝혔다.

'공영방송에 만연한 불법·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MBC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신문 내용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김달아, 2016, 9, 26). 방문진이고 방통위고 국회고 철저하게 진영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은 심하게 훼손되고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3) 조직 내 대항 세력의 붕괴

### (1) 무단협 4년차의 노동조합

이명박 정부 이래 방송계는 '낙하산 사장'에 대한 저항으로 수차례 파업을 단행했고 2012년에는 공영방송의 공정방송과 정치적 독립을 목적으로 MBC, KBS, YTN 3사 공동파업까지 단행되었다. 그러나 정계나 시민 사회적 연대의 결핍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도 위 방송사들은 파업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보복과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3사에 대한 공권력 탄압의 징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이래 YTN 해고 6명 (현재 3명)
- 2008년 이래 KBS 해임 1명, 정직 23명
- 2012년 이래 MBC 해고 10명(서울 9, 2010년 2 포함), 명령휴직 3명, 정직 82명 총 110명(현재 해고자 6명)

특히 노동조합은 2012년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중재에 의해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의 약속을 담보로 170일간의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이오성, 2015, 8, 3). 노조는 현재 단체협

약이 끝난 상태로 4년째 무단협약의 상태다. 회사가 단체협상안의 ‘공정방송조항’을 이유로 협상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공추위(공정방송추진위원회)·민실위(민주방송실천위원회) 활동은 크게 약화되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와 저항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투항’의 상태라고도 말한다. “회사에 의해 발가벗겨져 납작 엎드린 상태”라고까지 말한다.

본부노조가 단체협약이 없잖아요. 단체협약 체결을 안 해줘요. 공정방송조항을 문제 삼아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노조 상근자들을 타임오프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부, 원직 복직을 시켜버렸거든요. 노동조합이 ‘88년에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상근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순전히 회사가 이런 식으로 MBC노조를 세계 압박을 한다. 방문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예요. (이용마)

2012년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벌인 이후 4년간 회사에서 징계(해고·명령휴직·정직·감봉)를 당한 노조원은 서울 본사의 경우 77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당한 노조원이 9명에 이른다. 그리고 ‘신천교육대’라는 별칭이 붙은 MBC 아카데미에서 파업 복귀 직후 1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보복인사’ 교육을 받았다. 회사의 해고·명령휴직·정직 등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사원이 60명이 넘고 부당전보당한 사원이 70명이 넘는다(문화방송노보, 2016, 4, 4). 회사는 “바른 말 하는 구성원들은 징계하거나 부당 전보”시키고, 4년째 무단협약인 상황 속에서 타임오프 해지를 통해 상근집행부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함으로써 노조를 고사시키고 있다. ‘공정방송’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아예 없애’려 하고 있다(문화방송노보, 2016, 10, 06). 복귀 명령에 따라 시사교양PD 30년차인 조능희 위원장도 MD(은행PD)로 주조에서 근무 하던 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여 4월 4일 단독으로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문화방송노보, 2016, 4, 4).

## (2) 언론사 조직문화의 변화

2015년 11월 16일 국회 고대영 KBS사장 후보 인사 청문회장. 보도국 정치부장, 정당 출입 중견기자, 대외정책 담당 기자 등 수많은 KBS기자들이 배회했다. 카메라를 든 기자 3명도 청문회장을 마크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KBS 기자 출신이다. 김경래의 고대영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시도는 고대영 후보 주변의 KBS기자들에 의해 차단되었다. 질문을 하려 하면 마이크를 빼앗기도 하고, “청문회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면서 시선을 차단하고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뉴스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입안의 핵'처럼 잘 처신해야 부장이든 특파원이든 앵커든 연수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 정신이나 직업적 양심보다 '생계형 호위무사들'의 자발적 투항이 오늘 한국에서 기자가 살아가는 실재다(김경래, 2016).

회사가 '낙하산 사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다시피 된 공영방송사들. 조직 내에서도 승진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심지어 기자와 PD들의 가치관이 이젠 '지사형'에서 '회사원'형으로 변모되었다고도 말한다. 미디어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조직문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한 요소이기도 하다.

인터넷 뉴스도 많아지고, 기자가 된다고 해서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시대가 되었으니까 기자상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너는 기자냐 월급쟁이냐 선택해라,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전 보도국 외교·국방 출입 기자 인터뷰, 2014, 9, 16)

언론 전반적으로 자기비하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팽창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이런 건 찾아보기 어렵고. 보도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요구되는 최소치만 하는 게 덕목이 되고. (최원형)

언론의 힘은, 인정받는 언론이 되려면, 권력자에 대한 견제나 비판에서부터 나오는데, 한국 언론은 상당한 부분, 자기의 힘이 현존 정치권력과 잘 붙어서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살 깎아 먹는, 한국 언론의 비극이라고 봐요. (최상훈)

MBC의 경우, 출신 지역과 가치관이 검증된 경력사원이 대규모 충원됨으로써 기자나 PD가 '회사형'으로 변화한 조직문화의 확산은 그만큼 더 빠를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사장과 임원진들을 향한 '생계형 호위무사'가 된 기자들. 권력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방송에서 다룬다는 건 그만큼 더 멀어졌다. 더 엄격한 '자기 검열'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 (3)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남용

‘바른 말 하는 구성원’에겐 보복 인사와 부당 징계, ‘부당 노동행위’를 남발해온 MBC. ‘바른 말 하는 시민사회와 언론’에도 소송을 남발해왔다. 현재 노동조합이 회사와 소송중인 재판이 총 73개인데, 조합 승소가 46개(일부 승소 8개 포함), 패소는 7개이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조합 승소율이 86.7%로 ‘열에 아홉’을 재판부가 회사의 잘못된 경영행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문화방송노보, 2016, 5, 24). 2012년 파업 이후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 연거푸 열린 재판에서 MBC노조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2014년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선고공판 판결문에서 밝혀 MBC 노조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백종문 녹취록’에서 나타났듯이 회사의 해고와 징계, 소송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계속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 비판자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위축시키고 기자로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해놓고, 지면 지는 거고, 어차피 오래가는 거니까... 언론 스스로 정치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그걸 비난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상훈)

해직자 최승호, 박성제 등 6명, 정직자가 100여 명이 넘으니까 다 무효 판결나면, 회사가 일도 안 시키고 25억 정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변호사가 50명 될 거예요, 우린 한 명 쓰는데. 여태 회사가 낭비한 임금 약 25억,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50억이 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PD A)

왜 MBC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항소를 계속할까.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회사가 노조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대상이 된 비슷한 발언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박경신, 2011). 주로 언론의 비판적인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피고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4) '권언유착'에 대한 법적 도덕적 처벌이 부재한 역사

7/2 수요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 (하누리, 2016, 11, 15)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메모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회의에서 “비판 언론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하누리, 2016, 11, 15).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 공영언론 장악의 진상을 낱알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공범인 언론 부역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자신들만을 위해 “청와대, 방통위, 방통심의위,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모든 언론을 유린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의 낙하산 사장들과 그 수하인 ‘기레기’ 수족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구보라, 2016, 11, 16).

독일 나치 정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던 여성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소위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일상화 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사회정의라는 게 있을 수 없죠. MBC 사태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자 C)

애국적 국민에게 상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주섭일, 1999, 8, 26)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해방됐을 때 드골 장군은 나치 독일을 찬양하고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인과 지식인 반역자들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심판대상이 된 것은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언론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을 휘둘러 국가의 도덕성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다(주섭일, 1999, 8, 26).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권을 탄압

하면서 권위주의 체제에 굴종했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처벌이 여태 없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언론인들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에 의해 중복으로 몰리거나 ‘밥그릇’을 빼앗기는 ‘신종 독재’를 겪으면서 각자도생의 삶을 강요당해왔는지도 모른다. 구조적 통제하에서 ‘악의 평범성’이 내재화되는 세상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백종문 녹취록’ 사건을 통해 MBC를 비롯한 한국 언론과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기관들과 국가가 권력적 편향성을 극도로 드러내며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려는 작업이다. 즉 2014년 1월 25일 폭로된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왜 주류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않고, 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이나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과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언론사의 담당 기자나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현직 위원들,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기능의 무력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통위와 방문진, 국회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규제기관들이 관리 감독을 회피하는 까닭은 방송규제기관과 국회의 친권력적 진영논리 때문임이 드러났다. 여기에서는 (1) 방문진의 진영논리, (2)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의 실패, (3) 국회의 정파성 등이 그 세부 원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된 까닭에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부당 노동행위’라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 세부원인으로는 (1) 무단협 4년차의 노동조합, (2) 언론사 조직문화의 변화, (3)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남용, (4) ‘권언유착’에 대한 법적 도덕적 처벌이 부재한 역사,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이래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통제와 개입으로 인해 한국의 방송저널리즘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원용진·홍성일, 2015)에서 보수·주류 신문사의 종편TV 진출은 한국 언론지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층 더 보수적으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신태섭(2017, 1, 22)은 여론지형(보도·시사 영역의 시청취구독점유율)이 ‘95:5’로 구조적·일방적으로 기울여졌다고 본다. 이렇게 편향된 언론 구조 속에서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주류

언론에 의해 무보도되었고 시민들의 알 권리는 침해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붕괴되어왔던 것이다.

한국의 언론을 걱정하는 현업 언론인, 학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제약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부터 개선해보자고 나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온 정권편향성과 독임제적 관료주의의 폐단을 줄곧 노정해온 방통위를 정권의 언론통제기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로 다시 구축하자는 노력이다(신태섭, 2017, 1, 22). 방문진과 KBS 이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정 정권에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방통위-방문진(혹은 KBS이사회)-MBC 사장(혹은 KBS 사장)으로 이어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작업이다. 지배구조 자체가 정권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사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론정보학회에서 2015년 방송학회 소속 학자 및 언론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 과제로 10명 중 7명은 '공정성'을 꼽았다. 그리고 91.8%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권순택, 2015, 6, 30). 또한 현업 언론인들이나 언론학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와 방송규제기관의 인선 과정이나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 특별다수제(혹은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당의 일방주의를 차단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의 추천·선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김서중, 2015). 강형철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홍보도구로 전락했다. 현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한다(2015, 11, 23).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당시 자문교수단이 유일하게 합의한 특별다수제를 새누리당이 거부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강형철, 2015, 11, 23).

MBC에서 회사의 중징계 위협을 무릅쓰고 막내 기자 3명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자사보도를 비판하는 '반성문'을 2017년 1월 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문화방송 중계차를 둘러싼 시민들이 '엠비시'를 '엠병신'이라고 비하하는 구호에서 시작된다. 수십만 명이 조회한 동영상에서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부끄러워서 "마이크 태그조차 달지 못했고 실내에 숨어서 중계하기도 했다", "보도본부장은 메인뉴스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2%대에 접어든 지금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라며 간부들을 격려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MBC가 왜 이렇게 됐을까. 황우석 논문 조작의 비밀을 파헤쳤던 MBC, ... 정부 정책을 앞서 비판하는 뉴스를 냈던 MBC, 저희 막내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MBC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엠비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동영상 말미에는 자막으로 “‘보도 정상화’를 위해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 사퇴, 해직·징계 기자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남지원, 2017, 1, 6; 원성운, 2017, 1, 6; 이운정, 2017, 1, 6; 최원형, 2017, 1, 5). 이 ‘반성문’을 계기로 선후배 사원들의 지원·격려 발언과 동영상에 잇따랐다. 2012년 공정방송 쟁취 투쟁으로, MBC는 현재 6명이 해고된 상태이고 회사 전체로는 기자나 PD, 아나운서 등 200여명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전보되었다. 해고된 기자 박성재(2017, 1, 9)는 “MBC가 이렇게 된 건”, “권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우리 선배들 탓”이라고 하며, “새해 벽두부터 용기를 북돋워준”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렸다.

저널리즘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Kovach & Rosenstiel, 2007/2009, 37쪽). 그리고 저널리즘은 진실과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125쪽).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저널리즘은 사실 확인의 규율에 의거한다(129쪽). 정파로부터 독립하고(172쪽)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한다(206쪽). 이러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기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시민들의 권리장전이기도 하다. 시민들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도 따르게 된다(357쪽). 시민으로서 이러한 권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비난하기보다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한다(362쪽). 그런 시도가 무시될 경우에도 다시 시도해야 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전화 등 여러 경로를 사용하려고 조언한다. 시민으로서 뉴스 조직에 이러한 피드백과 투고, 비판 등을 했어도 무시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구독을 중단하고 시청을 거부하라고 한다. 시민으로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시장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다(363쪽). 2012년 공영방송사들이 공동파업에 들어갔을 때 적지 않은 시민들이 파업을 지원하거나 파업 대열에 동참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자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 공영방송사의 명망 있는 기자나 PD들이 불법적으로 해고된 후 이들 해고자들이 중심이 되어 뉴스타파나 고발뉴스, 국민TV 등의 대안매체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후원해오고 있는 것도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책임의 소산일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정보 구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불굴의 노력을 보여왔다(심훈, 20014). 세계 공영방송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공영방송 투쟁사에 비추어 방송학계의 학자들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공감하여 공정정보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이론 구축에서부터 구체적 모델 구축에 이르기까지

지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주체들은 결국 정부와 공영방송 종사자 및 방송학계 전문가들, 즉 정·언·학이라는 삼각구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심훈, 2014).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사에서의 불법적 경영이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었더라면 소위 '사자방(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 비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 낭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참사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보수 신문의 기자들과의 접촉이 어려웠고, 공영방송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각종 기관의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는 데에 제약이 컸다. 수십 년 전부터 알아왔던 기자들도 주제가 불편해서인지 인터뷰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겨울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거리에 나선 풀뿌리 시민들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들불처럼 일어선 시민촛불혁명. 이참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간구한다.

## 참고 문헌

- 강상현 (2013). 공·민영 체계 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39-74.
- 강성원 (2016, 2, 26). “백종문, 술마시고 헛소리한 것일 뿐이라고?”. <미디어오늘>.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언론117년사(1883-2000)>.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형철 (2012). <공영방송 재창조: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서울: 나남.
- 강형철 (2015, 11, 23). “현 정부에선 공영방송 공정성 희망 사라져”. <PD저널>.
- 고재열 (2014, 12, 8). 종편, ‘경로당 방송’이 살아남는 법. <시사N>.
- 구보라 (2016, 11, 16). “특검, 대통령부터 언론부역자까지 조사하라.” <PD저널>.
- 권순택 (2015, 6, 30). 방송화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 91.8%. <미디어스>.
- 권순택 (2016, 2, 18). 방통위, MBC녹취록 조사도 전에 “사적인 자리”로 규정...“법인카드 사용 확인 했나?”. <미디어스>.
- 권순택 (2016, 4, 7). 고영주, “MBC녹취록 안건 이제 안 받아”. <미디어스>.
- 김경래 (2016). 너무나 익숙한 ‘생계형 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 <방송기자>, 28권(1·2월호), 18-19.  
URL: <http://reportplus.kr/?p=16537>
- 김경환 (2013). 새 정부 출범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언론인협회 새 정부 출범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발표집>. 서울: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 김경환 (2015). MBC 지배구조 개선방안. NCKK 언론위원회 연속토론회 두 번째 자료집 <MBC, 왜? 어떻게? 망가졌나!>.
- 김경환 (2016).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방식과 자격조건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41호, 5-35쪽.
- 김달아 (2016, 9, 26). ‘MBC 녹취록’ 백종문, 언론자유 핑계 대며 국감 불출석. <한국기자협회보>.
- 김상균·한희정 (2014).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242-272.
- 김서중 (2015). 특집1: 세월호 참사 1년, 한국 사회의 쇄신을 바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와 근본 원인. <역사비평>, 통권 110호, 37-64.
- 김수정·정영구 (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3호, 5-28.
- 김연식·박홍원 (2011). 방송 저널리즘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직능 및 방송사별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5권 1호, 5-30.
- 김연식 (2014). 방송 저널리스트의 방송 통제요인 인식 변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83-305.
- 김춘효 (2015). ‘시민’ 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NCKK 언론위원회 연속 토론회 세 번째 자료집.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김희권 (2015, 9, 21).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KBS 영향력 신뢰도 1위 '2관왕'. <시사프레스>.
- 남지원 (2017, 1, 6). '반성문 동영상' MBC 막내기자들에 "경위서 내라". <경향신문>.
- 남효운 (2006). 언론보도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의 규모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1호, 115-146.
- 문현숙 (2016, 2, 2). "공영방송 경영진이 특정당 대변해 여론조작". <한겨레>.
- 박경신 (2011).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 법리의 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4권 3호, 77-106.
- 박성제 (2017, 1, 9). "'짚어봐' 조롱 듣는 MBC 막내기자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 박은하·조형국·박홍두 (2014, 5, 8). 영정 들고 KBS 간 유족들 "교통사고 비유 망언 사과하라". <경향신문>.
- 박인규 (2010). 구조적 통제 하의 저널리즘: KBS 시사 프로그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09-245.
- 박준영 (1997). <한국신문뉴스결정의 역학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방송통신위원회 (2016, 1, 28).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방송통신위원회 (2016, 2, 4).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신태섭 (2017, 1, 22).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미디어오늘>.
- 심훈 (2014).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110-132.
- 안수찬 (2009, 4, 4). 언론탄압 탄탄대로. <한겨레21>, 제757호.
- 오택섭 (1998). 조선일보 대 최장집 논쟁이 남긴 언론에 대한 교훈. <저널리즘 비평>, 26권, 8-9.
- 원성운 (2017, 1, 6). MBC 막내기자 3명이 고개숙인 반성문(동영상).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용진·홍성일 (2015, 8월). <변화하는 저널리즘 환경과 탐사 저널리즘의 미래: 텔레비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한국PD연합회·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탐사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 유창하 (1989). <게이트키퍼(Gatekeeping)의 내적통제에 관한 연구: 기자들의 뉴스가치관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윤석민 (2013, 3, 20).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2020 미래 방송포럼 3' <공영방송 공공성 제고 및 정체성 확보> 발제문. 1-36.
- 윤영철 (2006, 4, 5). 전환기 한국 신문의 과제: '좋은 신문'의 조건.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국사회와 신문저널리즘 학술 세미나 발제문.
- 이기형 (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문화과학>, 104-128.
- 이승선 (2016).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국회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무절제한 정치권력, 흔들리는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오성 (2015, 8, 3). "MBC 파업 해결한다고 박 대통령이 약속했다". <시사IN>.

- 이윤정 (2017, 1, 6). MBC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MBC를 욕하고 비난하길 멈추지 말아달라”. <조선일보>.
- 이재경 (2003). 언론인 인식을 통한 한국 사회와 언론 자유의 조건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54-77.
- 이정국 (2014, 5, 5). KBS 보도국장 “세월호 희생자 교통사고 생각하면 많지 않다” 파문. <한겨레>.
- 이정환 (2012, 9, 30). 잔혹했던 언론 탄압 5년의 역사. <미디어오늘>.  
URL: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202.html>
- 이준용 (2013, 2, 13).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규제와 지배구조 개선 임무. 언론3학회 공동 주최 긴급 세미나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 발제문 (33-43쪽).
- 이춘구 (2014).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법적 연구: 공영방송 지배체제 입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2호, 217-265.
- 이효성 (2009). <방송,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영호 (2015). 한국 텔레비전 생산 연구의 실태 진단. <언론정보연구>, 52호 1권, 5-32.
- 문화방송노보 (2016, 4, 4). 파업특보 제1호 경고파업 돌입. <문화방송노보>.
- 문화방송노보 (2016, 5, 24). 떠난 이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문화방송노보>, 206호.
- 문화방송노보 (2016, 10, 6). 안광한 사장의 MBC, 그 흑역사(黑歷史). <문화방송노보>, 211호.
- 문화방송노보 (2016, 11, 15). 뉴스데스크, 100만 촛불마저 축소 급급. <문화방송노보>, 215호.
- 정수영·남상현 (2012).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265-309.
- 조항제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서울: 한울.
- 조현호 (2016, 5, 11). “국정원 댓글 리포트 빠라, 윤창중 톱으로 다루지 마라”. [단독]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보도개입 폭로... “큐시트 수정 지시 30여 건” ‘비망록’ 제출. <미디어오늘>.
- 조현호 (2016, 5, 12). 이정현, KBS 전화 걸어 “박근혜 행사가 왜 맨 뒤냐”. [단독] 홍보 수석 시절 보도국장에 뉴스편집 불만전화, “아쉬움 표시도 못하나... 지금이라도 할 것”. <미디어오늘>.
- 조현호 (2016, 5, 16). “김시곤 비망록, ‘KBS 이렇게 유린됐구나’ 느꼈다”. [인터뷰] 성재호, KBS 새노조위원장 길환영·이정현 검찰 고발... “권력 압력 프로세스 구체적으로 드러나”. <미디어오늘>.
- 정철운 (2016, 2, 19). ‘MBC 녹취록’ 진상규명 두고 미방위 여야 갈등. <미디어오늘>.
- 정필모 (2012).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KBS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섭일 (1999, 8, 26). 반역자 처단이 프랑스를 단결시켰다. <한겨레21>, 272호.
- 주정민 (2012).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KBS. <공영방송의 이해>, 파주: 한울.
- 최영목·박승대 (2009).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방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호, 590-626.

- 최영목 외 (2012, 2).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KBS 외. <공영방송의 이해> (245-274쪽). 서울: 한울.
-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476-510.
- 최진봉 (2014). <길환영 방지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토론회 자료집.
- 최원형 (2017, 1, 5). MBC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 “계속 욱해주시시오”. <한겨레>.
- 최원형 (2016, 1, 25). “파업 PD들 다 배제시켜” “고발프로 전혀 못하게 통제”. <한겨레>.
- 하누리 (2016, 11, 15). [TV조선 특종] 청와대 “비판언론 불이익 가도록” 지시. <TV조선>.
- 하수영 (2016, 9, 27). “국감 불출석 백종문,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PD저널>.
-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2015, 5, 14). NCKK 언론위원회 연속토론회 두 번째. <“MBC, 왜? 어떻게? 망가졌나!”>.
- 한수경 (2015). 방송과 공정성: 방송의 지배구조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정치와 평론>, 17집, 49-77.
- 홍은희 (2006). 신문사의 경영적 통제요인과 기자의 홍보원 인식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10권 1호, 66-86.
- 황근 (2010). 미디어 거버넌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 <한국언론정보학보>, 3권 2호, 224-247.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2<sup>nd</sup> ed.). 이재경 (역) (2009).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1. 23. 최종수정일자: 2017. 1. 26.

# A Crisis in Public Broadcasting of South Korea

A Perspective from the Case of the So-called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at MBC  
with a Focus on the Press Control by Political Power

**Sang Gyoon Kim**

Senior Researcher, The Media, Culture and Contents Research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ase of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has presented “an important and serious challenge to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this case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ainstream news media. It has also been forgotten without a proper fact-finding or investigation by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the above has happe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reporters and TV producers, senior journalists, former and incumbent commissioners of the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and experts of the industry, as well as literature research. Here, I present three answers. First, I found two reasons the mainstream press has ignored this incident. 1) It serves for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reporting truth. 2) Public broadcasters’ watchdog role has been neutralized. Second,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uled by political tribalism. The ruling party’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se agencies were reluctant to investigate allegations surrounding Paik Jong-moon, such as illegal dismissals, illegal intervention in programming or production, illegal recruitment and illegal business deals. That’s because they considered CEO Paik an ally. Using their majority power, they have rejected the request from opposition-affiliated commissioners or from opposition lawmakers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Third, there were no alternative forces within the public broadcasters to unveil the truth. In conclus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hake-up of corporate governance is urgently needed for public broadcasters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KEYWORDS**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Tribalism, Illegal Dismissal,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Media-Politics Collusion.